

다가오는 식량 위기와 우리의 올바른 대응방안은?

세계 곡물시장은 생산량 감소?소비 급증?투기 자본 유입 등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식량 부족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자급률이 25.3%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번호에서 세계적인 곡물 수급 현황과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애그플레이션의 공습은 시작 되었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3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본격인도가격(FOB)은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한 톤당 59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94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태국산 장립종도 같은 기간 59% 인상된 톤당 520달러에 거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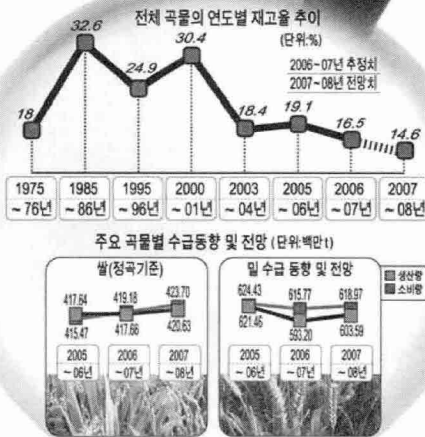
세계 곡물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옥수수도 운임포함가격(C&F) 기준 톤당 358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3%나 올랐다. 대두는 지난해 3월 대비 83.5% 오른 톤당 633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밀은 캔사스 상품거래소에서 올해 3월물 인도분 선물가격이 톤당 483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8%나 급등했다.

이같은 곡물대란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서 기인하는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인구증가 등으로 식량부족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곡물대란의 원인은 크게 6가지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따른 곡물 및 육류소비 증가와 배럴당 110달러 넘어선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대체 연료용 곡물수요 증가, 지구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에 의한 생산량 감소,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곡물 수출국의 수출세 부과, 국제투기자본 유입 및 국제 해상운임 상승 등이다.

▶ 우리나라는 왜 세계 곡물 시장에 민감해야 하는가?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권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지난 6일 'OECD 회원국 곡물자급률'이란 보고서에서 OECD 29개 회원국의 곡물 자급률(2003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5.3%로 26위였다고 밝혔다. 곡물 자급률은 국내 곡물(사료·가공용·연료용 포함) 생산을 국내

곡물 소비로 나는 수치로, 적을수록 자급도가 낮은 것이다.

곡물 가격 상승은 무엇보다 국내 물가 상승세 및 식량 수급 불안을 가중시킨다. 전반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밀가루, 라면, 피자 등 생활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는 현상은 2008년 한 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업계 전문가 대부분의 전망이다.

한국의 취약한 식량 수급 구조에 비춰볼 때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은 그대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게 된다.

또한,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탈북자들의 이탈을 가속화 해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 질 수도 있다.

▶ 우리 정부는 '관망 중'

농식품부는 곡물가격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곡물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아직은 대세인데 일부에서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 현상 조짐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새만금 용지의 70%를 타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세계 각국은 식량 부족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식량의 자급보다는 유사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농림부는 1999년 '식량안보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안보와 연결시켜 식량 안전 보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수출국들은 곡물 수출 규제와 수출세 부과 등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 우리의 대응방안은?

우선 중장기적인 식량자급률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실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농가소득 확충 방안, 농지 보전 및 보상 등 자급 기반 확충 방안,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재개정 및 국민 건강 식단 보급 등 소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지속적인 농업기술 교류를 통해 발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비축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고위험·저수익 구조인 해외 농지 개발은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 정부의 혈세만 낭비 할 수 있고 자국에서 수출을 통제 할 경우 리스크도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